

## I. 점검추진 개요

# 참여정부 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2006. 3. 8

國務調整室

### □ 공약 관리 현황

- 총1,347건의 공약중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 177개의 핵심공약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서 관리
  - 핵심공약 이외 정치관련 공약(14건)은 대통령비서실 관리, 중점(553) · 일반공약(602건)은 부처 자체관리
- ※ '03년 7월 부처의 핵심공약 추진계획을 취합 대통령님께 보고
- 국무조정실은 공약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초 부처 추진실적을 종합점검
  - '04년~05년 두차례 참여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핵심공약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여 부진사항 점검 및 추진촉려

### □ 중점 점검 내용

- '05년 3월 이후부터 '06년 1월말까지 177개 핵심공약에 대해 4대 분야 12대 국정과제별로 추진상황 점검

4대 분야	12대 국정과제별 공약분류(177건)
1. 경제(48)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14)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17)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발전(13)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4)
2. 사회·문화·여성(66)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16)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14)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31)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5)
3. 정치·행정 (46)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25)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21)
4. 외교·통일·국방(1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17)

- 목표 달성도, 추진내용의 충실성, 조치시한에 따른 추진진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을 집중점검

## II. 핵심공약 추진상황 종합

- 핵심공약 177건 중 총 64건의 과제가 완료되었고, 103개 과제가 정상추진되는 등 대부분의 과제(94.4%)가 차질없이 진행중임.
- 다만, 입법추진 지연(5건), 사회적 합의 미흡(3건), 추진계획 이행 미흡(1건), 부처간 이견(1건)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10건(5.6%)이며
  - 지난해에 이어 국회 입법지연 등으로 금년에도 계속하여 부진으로 지적된 과제도 5건임.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한시적 특별검사제, 재정건전화법, 의료분쟁조정법,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등
- 정상추진이지만 조치시한을 연장하거나 추진계획 중 일부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4건임.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소득과약강화를 위한 조세 및 사회보험형평성 제고, 식품안전 감시체계 도입

□ '05년에 비해 완료과제가 11건 증가하였으나 추가보완 및 부진과제는 '05년과 비슷한 수준임.

- \* '05년 완료과제 : 11개
- 사립학교법개정, 단위학교 자율권 강화, 학력차별제도 철폐, 인재지역할당제도입,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돈세탁방지법강화, 식약청 기능확대, 객관적 인사평정 기준마련,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방과후교육활성화, 남북회담 정례화

### ['05년 추진실적 비교]

구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진행중	추가보완필요	
'06. 2월	64건	99건	4건	10건
'05. 2월	53건	109건	5건	10건
증 감	11	△10	△1	-

※ 별첨 1 : 핵심공약 과제별 추진상황

□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비교해보면

- 사회·복지분야, 정치·행정분야가 완료과제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진 및 추가보완·조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경제, 외교통일분야는 부진과제는 없으나 장기추진과제가 많음에 따라 완료과제비중(27%)이 낮은 편임.

### 【분야별 추진상황】

4대 분야별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진행중	추가보완필요	
경제	48	16	32	0	0
사회·문화·여성	66	27	31	2	6
정치·행정	46	20	20	2	4
외교·통일·국방	17	1	16	0	0
합 계	177건	64건	99건	4건	10건

※ 별첨 2 : 4대분야 12대 국정과제별 공약추진상황

□ 참여정부 3년간의 주요성과로는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3대 특별법제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FTA이행특별법 제정, 주5일근무제 도입, 호주제 폐지 등이 우수한 개혁사례로 평가되며
- 사립학교법개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돈세탁방지법강화, 남북회담 정례화 등이 '05년의 주요성과임.

4대분야별	주요성과
경제분야	FTA이행특별법, 통합도산법제정, 회계제도 선진화관련 법정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입, 돈세탁방지법강화 등
사회·문화·여성	호주제폐지, 주5일제 실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등
정치·행정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제정, 주민투표법제정, 지방재정 독립성을 위한 양여금제도개편 등
외교·통일·국방	남북회담 정례화

### Ⅲ. 사례별 분석

#### 1. '05년 추진실적 우수 사례(6)

##### □ 사립학교법 개정(교육부, 완료)

- 사학재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학비리예방 등 건전 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법개정 추진('04.10 국회제출)
  - 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심의 의결(12.9) 및 공포('05.12.29)
- '06.7.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학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령 개정작업 중

##### □ 돈세탁방지법 강화(법무부·재경부, 완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05.1)으로 돈세탁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보

##### ① 고객주의의무(고객알기제도)의 도입 ('06. 1. 18.부터 시행)

- 외국의 선진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국내에서도 수용

##### ②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06. 1. 18.부터 시행)

-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

\* 보고기준금액의 하향조정 : 5천만원('06년)→ 3천만원('08년)→ 2천만원('10년)

##### ③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5천만원→2천만원('04.1.시행령개정)

##### □ 고령화사회대책 기본법 제정(보건복지부, 완료)

- 소득보장, 고용, 연금, 교육, 문화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고령화를 감안한 중장기적 방향설정과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05.4.26) 및 시행('05.9.1)

##### □ 차별시정위원회 설치(인권위원회, 완료)

- 성, 장애,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학벌 등 우리사회의 차별 문제를 시정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인권위법 개정('05.7.29)으로 법적근거 마련 및 위원회 구성('05.8)

##### □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통일부, 완료)

- 남북차관급회담('05. 5.16~19)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남북대화를 정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남북장관급회담 3회: 6.21-24 서울, 9.13- 16 평양, 12.13-16 제주도
  -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 2회,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2회,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 실무접촉 3회 등

##### □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수확충(행정자치부, 추진중)

-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해 '99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추가시키는 것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관계부처 및 한전 등의 반대로 입법지연
  - '05년 5~7월 실무적 협의 및 이견조정과정을 통해 원전소재 시·군 등 지자체간 세입재원 배분조정 등 원전세 도입 합의
-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 입법 완료('05.12.31 지방세법개정 공포·시행)

## 2. 추진이 부진한 사례(10)

### 1] 입법조치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례(5)

#### □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예산처)

-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동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재정법」 제정을 별도 추진

※ 주요내용 :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재정건전화후 신설)

- 한나라당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체법안(「국가건전재정법안」)을 국회에 제출('04.12.6)

- 정부안과 한나라당안간 절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05.11~12) 등을 통해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입법 지연

⇒ 협의체 회의를 속개하여 양 법안간 절충안 마련을 완료하고 이를 운영위에 상정, 조속한 입법 추진

####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법무부·부방위)

-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 야당은 기본적으로 기관의 독립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자체에 부정적 입장 견지(現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

⇒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협의, 여야협력 강화 추진 등 소관 부처 특단의 대국회 활동 노력 필요

####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복지부)

-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인정,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 관계부처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의 위험소지(법무부) 및 정부예산 부담(예산처)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협의 지연

- 현재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 관한법률”로 변경, 의원입법으로 발의('05.12.8), 현재 보건복지위 계류 중

⇒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의료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여론수렴 및 당정협의 강화 등 대국회 노력을 경주

####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복지부·식약청)

-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9개 법령에 나뉘어져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F를 주관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식품안전기본법 정부안 국회 제출('05 3.23), 현재 복지위 계류중

- 현재 정부안이외 의원발의안(6개) 등 총 7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법안심사 과정의 어려움 및 단일안 마련이 곤란, 국회에서 입법지연

⇒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단일안 도출 노력 및 조속한 국회처리 추진

## ② 사회적 합의 미흡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례(3)

### □ 학교운영위 확대강화 및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교육부)

-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에 관해 **교육관련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안 도출 지연(초·중등교육법개정안 복지위 계류)
- 사학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총 등은 **학교자율경영권 침해·학내 분란 소지 등의 이유로 반대**
- \* 사립학교법개정('05.12)을 통해 사립학교운영위 자문사항중 예·결산사항은 임의자문에서 **필수자문사항으로 전환**

⇒ **교원단체 이견 조율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합의안 도출**

### □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복지부)

-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 제출중('04.6.2)이나
- ※ 보험료율(9%→'30년 15.9%로 인상), 급여수준(60%→'08년 50%로 인하)
- 노동계(현행 60%유지)와 사용자 단체(40%로 인하)간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의견대립이 지속**
-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연금제 도입** 등 연금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논란

⇒ 법 개정 지연에 따른 연금 재정고갈 가속화, 후세대의 부담 가중 등에 대한 대국회·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조속한 사회적 합의 분위기 마련 필요

## ③ 부처간 이견조정미흡 과제(1)

### □ 사회적 차별금지 및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가인권위원회)

- 차별금지의 당위성과 현실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어 법 시안 마련에 어려움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주무부처를 정하는데 있어 관계 부처간 이견차 존재**, 입법논의가 지연
- ⇒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한 조속한 방향확정 및 주무부처 결정, 부처간 이견해소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법안 마련

## ④ 추진계획 이행이 부진한 과제(1)

### □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복지부)

- 「노인복지법」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05.12.27)**
-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근거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관련 비용 지원 근거 마련(「노인복지법」개정, '05.7.13)
- \* 중앙 및 지방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위탁 사항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관련 비용 부담 사항 규정(「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 '05.12.27)

- 다만,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이 중단되어 **노인인력개발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인력 부족**
- 중앙과 일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가 전무**

⇒ 일자리창출이 국가차원의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전담기관 설치 및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노인인력개발원 예산확보방안을 강구**

## IV. 향후 조치계획

◆ 참여정부 4년차에 접어들에 따라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 핵심공약 추진 독려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과 민생·복지 현안 과제, 주요 국정과제 관련 공약에 중점을 두어 추진

### □ 향후 핵심공약 관리 및 점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 금번 종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약 실천계획 변경·보완 및 조치시한 도과과제에 대한 조정 등 후속조치 추진

### □ 부진 또는 보완필요 과제에 대한 대책 마련(각부처, 국무조정실)

- 각부처는 부진과제에 대해 부진사유 분석 및 대책을 마련, 후속조치계획을 다음 분기실적 보고서 함께 제출
- 이해 집단간·부처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주무부처 주관으로 적극 노력하되,
  - 부처간 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책임장관회의 또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 조정
- 재정수반공약은 각부처가 재원조달방안 등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총액자율편성제도에 따라 부처 예산에 적극 반영
  - 대규모·장기 예산수반과제는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 조치

## 【별첨1】

### 핵심공약 추진상황 총괄표

#### 1.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1. 기초과학연구투자 확대	과학기술부	정상추진	'07하	
2. R&D 예산 지속 확대	과학기술부	정상추진	'07하	
3. 2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산업자원부	정상추진	'07하	
4.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상추진	계속	
5. 세계최고의 디지털강국 실현	산자부, 정통부	정상추진	'07하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산업자원부	정상추진	계속	
7.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산업자원부	정상추진	계속	
8. 차세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통부, 산자부	정상추진	계속	
9.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해양수산부	정상추진	'06하	
10.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육성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상추진	계속	
11.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확대	과학기술부	완료	'03하	
12.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단축	과학기술부	완료	'03하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13.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 신설	과기부	완료	'03상	
14. 이공계대학교육및연구지원법 제정	과기부	완료	'03하	
15.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의 고도화 추진	노동부,교육부	정상추진	'07하	
16. R&D 특구 지정·육성	과기부	정상추진	'07하	
17.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특허청	정상추진	'07하	

## 2.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18.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육부	정상추진	'05상 →'06하	○
19. 교육재정 지속 확충	교육부	정상추진	'08하	
20.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교육부	완료	'04하	
21.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교육부	완료	'03상	
22.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 행정개혁	교육부	정상추진	'05하 →'06하	○
23.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추진	교육부	정상추진	'07하	
24.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부	완료	'05하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25.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교육부	부진	'05상 →'06상	○
26.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교육부	부진	'05상 →'06상	○
27.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교육부	완료	'05상	
28.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문화재청	정상추진	계속	
29.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문광부	완료	'03. 7월	
30.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구성	문광부,정통부 방송위	추가보완	'07하	
31.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문광부,정통부 방송위	추가보완	'07하	
32.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정상추진	'07하	
33. 정보격차 해소	정통부	정상추진	계속	

## 3.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34. 자영업자 소득과약개선 등 보협료 공평부과	복지부	완료	'03하	
35. 여성채용목표제 확대실시	여성부,노동부	정상추진	'06하	
36. 차별시정 국가실행 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정상추진	'05상	
37.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완료	'05상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38.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	교육부	완료	05하	
39. 사회적차별금지및시행에관한특별법제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진	05하 →계속	○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노동부,산자부,중기청,법무부	완료	'03상	
41.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인사위,행자부	완료	'07상	
42.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 의무 명시(자녀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 의무화)	법무부	정상추진	'06상	
43. 호주제 폐지	법무부,여성부	완료	'04상	
44.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부,노동부,중기청	정상추진	'07하	
45.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노동부,여성부	정상추진	'07하	
46.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 마련	여성부,법무부	완료	03하	
47. 성매매 방지법 제정	여성부,법무부	완료	'04하	

#### 4.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48. 남북경제공동구역 설치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49. DDA 협상에 적극 대비	외교부,재경부,산자부,문광부,농림부,해수부,정통부,관세청,방송위	정상추진	계속	
50. 동북아 경제협의회 구성	외교부,산자부	정상추진	'07하	
51.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52.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개발	해수부	정상추진	계속	
53. 항만공사법 제정	해수부	완료	'03상	
54. 지역항만공사 설립	해수부	완료	'04상	
55.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56.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로 육성	재경부	정상추진	'07하	
57.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 확충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58.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59.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정통부	정상추진	'07하	
60.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건교부,재경부	정상추진	계속	

#### 5.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61. FTA 이행특별법 제정추진	농림부	완료	'03하	
62.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복지부,농림부	완료	'03하	
6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복지부,농림부	완료	'04상	
64. WTO/FTA 협상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농림부,해수부	완료	'04하	



## 6.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65. 소득과약 강화를 통한 조세 및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국세청	추가보완	'05상 →'07상	○
66.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감사원	정상추진	'07하	
67.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	감사원	완료	'03상	
68.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 체계 조기구축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69. 소방 방재청 신설	행자부	완료	'03하	
7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무부,부방위	부진	'05하 →'06하	○
71. 공직사회 비리척결	법무부,행자부 부방위,감사원	정상추진	계속	
72.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추진	중앙인사위	정상추진	계속	
73.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법무부	정상추진	'05하 →'06하	○
74. 돈세탁방지법의 강화	법무부,재경부	완료	'07하	
75.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 법규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07하	
76.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법무부	부진	'05하 →'06하	○
77.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복지부, 식약청	부진	'05하 →'06하	○
7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식약청,복지부	완료	'05하	
79.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 체계 도입	식약청	추가보완	'05하 →'06하	○
80. 재정건전화법 제정	예산처	부진	'05하 →'06하	○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81.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정통부,행자부	정상추진	'07하	
8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구현	중앙인사위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83.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외부인사 참여 확대	법무부	완료	'03하	
84. 각 부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행정 강화	중앙인사위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85. 다면평가제 등 객관적 인사평가 기준 마련	중앙인사위 행자부	완료	'04하	
86. 우수인재풀의 극대화	중앙인사위	완료	'04상	
87. 인사행정 기능의 정비	중앙인사위 행자부	완료	'04하	
88.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예산처	완료	'04하	
89.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정상추진	'05상 →'06하	○

##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90.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노동부	정상추진	'06하	
91.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노동부	완료	'03하	
92.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	노동부	정상추진	'07하	
93. 주5일제 조기정착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부	완료	'03하	
94. 주5일근무제 시행 중소기업 세계 지원 등 도입 지원 확대	재경부,중기청, 노동부	완료	'03하	

### 8.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95. 언론산업 선진화	문광부	정상추진	계속	
96.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공정위	정상추진	계속	
97.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 도입	재정부,법무부	완료	'03하	
98. 통합도산법 제정	법무부	완료	'03하	
99.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재정부	정상추진	계속	
100. 재벌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재정부,공정위	완료	'04하	
101.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재정부,공정위	정상추진	'07하	
102.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재정부	정상추진	계속	
103.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재정부,금감위	완료	'04상	
104.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공정위	정상추진	계속	
105. 과도한 접대비 지출 관행 개선	국세청	완료	'03하	
106.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적극 도입	재정부	완료	'03하	
107.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	공정위	정상추진	계속	
108.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재정부	정상추진	'07하	

### 9.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109. 호남고속철도 신설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11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담 추진 기구 설치	건교부	완료	'03상	
111. 신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후속기획단	정상추진	계속	
112.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교육부,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113.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 강화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114.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교육부	완료	'04상	
115.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교육부	완료	'03하	
11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마련	재정부,행자부	정상추진	'05하 →'07하	○
117.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행자부	완료	'04하	
118.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수확충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119. 지방양여금 확대 및 개선	행자부	완료	'04하	
120.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설치	행자부	완료	'04하	
121. 자치경찰제 도입	행자부,경찰청	정상추진	'05하 →'07하	○
122. 주민소환제 도입	행자부	정상추진	'05하 →'07하	○
123. 주민투표제 도입	행자부	완료	'05하	
124.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행자부	완료	'03하	
125.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 정비	건교부	완료	'04상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1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산자부,예산처	완료	'03하	
1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예산처	완료	'03하	
128. 기업 지방이전 촉진	건교부,산자부	정상추진	계속	
129.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 10.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130.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	건교부	완료	'03하	
131. 250만개 일자리창출	노동부	정상추진	'07하	
132. 40세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복지부	정상추진	계속	
133.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 제공	복지부	완료	'04상	
134.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복지부	정상추진	'06하	
135. 건강보험제통합 유지·보완	복지부	완료	'03하	
136.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복지부	완료	'04하	
137.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복지부	정상추진	'06상	
138.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복지부	완료	'04상	
139.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0.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복지부	완료	'04상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연장
141.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2.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3.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복지부	부진	'05하 →'06하	○
145. 저소득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시행	여성부	정상추진	'07하	
146.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복지부	완료	'05하	
147.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복지부	부진	'05상 →'06하	○
148.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9.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	복지부	부진	'07하	
150.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 대책기구 설치	복지부	완료	'03하	
151. 만 5세아동의 무상보육 및 교육의 확대	교육부,여성부	정상추진	'07하	
152.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	교육부,복지부	완료	'05하	
153.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54. 차상위계층(의료급여)시행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55. 참여복지5개년 계획 실천	복지부	완료	'03하	
156. 투기수요억제대책의 지속적 추진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157. 주택자금 지원 강화	건교부,재경부	정상추진	계속	
158. 주택공급 확대	건교부	정상추진	'07하	
159.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 기반 구축	환경부	정상추진	'06하	
160. 지속가능발전위 위상강화	환경부	완료	'03하	

### 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 시한	시한연장
161.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남북관광 교류 확대	통일부	정상추진	계속	
162. 개성공단 건설 실현	통일부	정상추진	계속	
163.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	통일부	완료	계속	
164. 국민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5.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6.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7.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8.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9.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방송교류 활성화	통일부, 방송위	정상추진	'07하	
170. 남북간 방송기술 교류 지원	통일부, 방송위	정상추진	'07하	
171. 남북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 상호간 신뢰증진	통일부	정상추진	계속	
172.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 해결	통일부	정상추진	계속	
173. SOFA 개정 및 운영체계 개선	법무부,외교부	정상추진	'07하	
174.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통일부,국방부	정상추진	계속	
175.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해결	통일부,외교부	정상추진	계속	
176. 북한 핵문제 해결	통일부,외교부	정상추진	계속	
177.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주도	외교부,통일부	정상추진	'07하	

### 【별첨2】

### 4대분야 12대 국정과제별 공약추진 현황

분 야	12대 국정과제	계	추진현황			
			완료	정상		부진
				추진	보완	
1. 경제 (48)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4	6	8	0	0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발전	13	2	11	0	0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17	4	13	0	0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4	4	0	0	0
	계	48	16	32	0	0
2. 사회 문화 여성 (66)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6	5	7	2	2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31	11	17	0	3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4	7	7	0	0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5	3	2	0	0
	계	66	26	33	2	5
3. 정치 행정 (46)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25	9	10	2	4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21	11	10	0	0
	계	46	20	20	2	4
4. 외교 통일 국방 (1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7	0	14	0	3
	계	17	0	14	0	3
총 계		177	63	99	4	10